우리 인생에도 시뮬레이션 교육을

인천의 아침

이 길 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교수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 사건이나 과정을 시험적으로 재현하는 기법이다. 컴퓨터 게임의 한 장르로 시뮬레이션 게임이 익숙한 이들도 있고, 시뮬레이션에 좀더 복잡한 기술이 더해진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로 접하기도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이 개인이나 팀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를 학습하기 위해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실제 상황에서 숙련되지 않은 교육자에게 생명을 맡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사고 현장에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면 참가자는 당황하거나 실수하면서 어떤 것을 놓치면 안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습득하게 된다. 예전에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이 없는 반면 의료인 대비 환자는 너무 많아 몸으로 부딪치면서 익숙해졌고 그런 과정에서 숙련되지 않은 의료인 때문에 고통받은 이들이 있었다. 심장마사지, 기도삽관, 흉강삽입 등 침습적인 처치에 대해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 새내기 의료인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최대 장점은 현실에서 하면 안되는 실수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면 처음엔 당황하고 긴장해서 아는 것도 빠뜨리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복된 교육과 다른 참가자의 실수를 관찰하며 익숙해지게 된다. 이런 장점을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인생을 살아가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고 실수하기가 쉽다. 부부 사이의 작은 오해가 커져 가정이 깨지고, 친구에게 받은 상처로 소중한 생명을 마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을 모두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할 수도 없고, 인간의 다양한 반응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를 본다면 머지 않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만남과 갈등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선현들이 말씀하시는 인간다움이다. 하지만 건강검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 생긴 갈등을 예방하고,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면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정부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힘있고 잘사는 일부가 아닌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책을 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뮬레이션 연습과 훈련을 통해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지지대

식량 무기화

지구촌 곳곳에서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미사일과 탱크가 동원되는 전쟁도 있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싸우는 나라도 있다. 기아나 기근과 싸우는 국가도 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나라들에겐 의약품이 무기고, 굶어죽는 사람이 많은 나라들에겐 식량이 무기다.

최근 '식량의 무기화'가 세계 이슈가 됐다. 식량 자급자족이 어려운 국가를 압력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식량을 무기로 삼는 일이 식량의 무기화다. 미래의 자원 싸움은 식량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전문가가 많다. 국제적으로 농산물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식량 수출이 중지되면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위기가 최소 3년, 길게는 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0%, 옥수수 수출량의 15%, 해바라기씨 수출의 약 60%를 담당한다. 그런데 전쟁으로 겨울 밀, 보리, 귀리 등 곡물의 30%를 수확할 수 없고, 흑해 봉쇄로 곡물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올해 농지의 50%도 파종하지 못했고, 많은 농민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현재 수준의 식량 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했다. 주요 곡물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가 지난 14일 식량 안보를 확보하겠다며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이른 폭염으로 올해 밀 수확량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0%에 불과하다. 소비량의 8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소한 기초식량은 국내에서 자급할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곡물 생산국의 식량 무기화가 현실화 됐고,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경기일보 kyeonggi.com

발행·편집·인쇄인·회장 신항철 | 사장 이순국 | 주필 김종구 | 편집국장 이용성
인천본사 사장 김기태 | 인천본사 편집국장 유제홍

대표전화 031-250-3333 | 인천본사 032-439-2020 | 서울본사 02-3486-6245
기사·사진제보 031-250-3410 | 광고신청·접수 031-250-3351~2
구독신청·배달안내 031-250-3370~1 | 독자투고·동정·모임·부고 031-250-3430

본 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3번길 6(송죽동) (우)16303
인천본사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7(십정동) (우)21436
1988년 8월8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가-51호)
구독료 : 한 달 1만5,000원 / 1부 800원
경기일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설

김은혜 후보發 '재산세 감면 119' 공약 유권자 절반이 당사자, 좋은 논쟁하라

김동연 후보가 밝혔다.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동시 이전하고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 김은혜 후보도 밝혔다. "저는 당선되는 즉시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국제공항 설치TF'신설을 강력 건의하겠다." 두 구상에 무슨 차이가 있나. 도지사 시켜 주면 공항 옮기겠다는 같은 말이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렇다. 말로는 대선(大選)급인데 내용이 없다. 후보간 딱히 차이도 없다. 오죽하면 '똑같은 얘기를 서로 사골 끓인다'는 비아냥이 토론 중에 나왔다.

이런 선거판에 시끌벅적한 화두가 떴다. 서로 입장 차가 확연하다. '119 감세 공약'이다. 김은혜 후보가 던졌다. 재산세 감면 약속인데 내용이 파격적이다. 1가구 1주택에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얘기다. 과세표준 3억원이면 공시가 5억원이다. 시가로는 8억 6천만원으로 대략 9억원 선이다. 경기도 주택의 공시가 중위값이 2억 8,100만 원이다. 그 두 배인 5억원까지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김 후보 측에서 수혜 대상 도민을 분석했다. 위 기준에 의할 경우 "도내 주택의 약 61%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 금액도 설명했다. 연간 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147만호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최대 42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이후 공시가 인상은 주택 소유자에 큰 부담이다. 특히 경기도는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공시가 상승률이다. 눈길이 갈만한 화두다.

보유세 강화가 갖는 상징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세재·주택 정책의 큰 방향이었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다. 정권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등과 겹치면서 주춤한 측면이 있다. 때로는 '강남 부자에 고개를 숙였다'는 비난을 받은 사실까지 있다. 그렇더라도 보유세 강화(공시가 현실화)는 문 정부가 놓지 않았던 중요한 정책 방향이었다.

이러니 '재산세 감면 119'에 민주당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당장 시장 군수 후보들의 반박이 쏟아졌다. 도지사가 좌우할 법률이 아니며, 1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면 (줄어드는)세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은혜 후보 측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한다. '법률 확인도 없이 공약을 냈겠나' '퍼주기 원조 민주당은 지방 재정 걱정 할 자격 없다' '문재인 세금 폭탄을 바로 잡는 작은 시도일 뿐이다'.

세금 인상에 대한 분노가 많다. 그 중심에 공시가 폭등이 있다. 그 공시가를 일정 구간 무력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세금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매년 30만~40만원씩 보태준다는 얘기다. 사실상 퍼주기 공약 아닌가. 과거 선거 때 지원금 살포, 현금 복지 공약과 다를 것 없다. 선거 공약 소재로는 아무래도 과하다. 하지만 유권자가 매길 점수는 어찌 될지 모른다. 어쩌면 몰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 선거에서 지원금·현금 공약에 몰표가 갔던 것처럼 말이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해당되는 '재산세 감면 119'다. 도민에 이익될 좋은 논쟁을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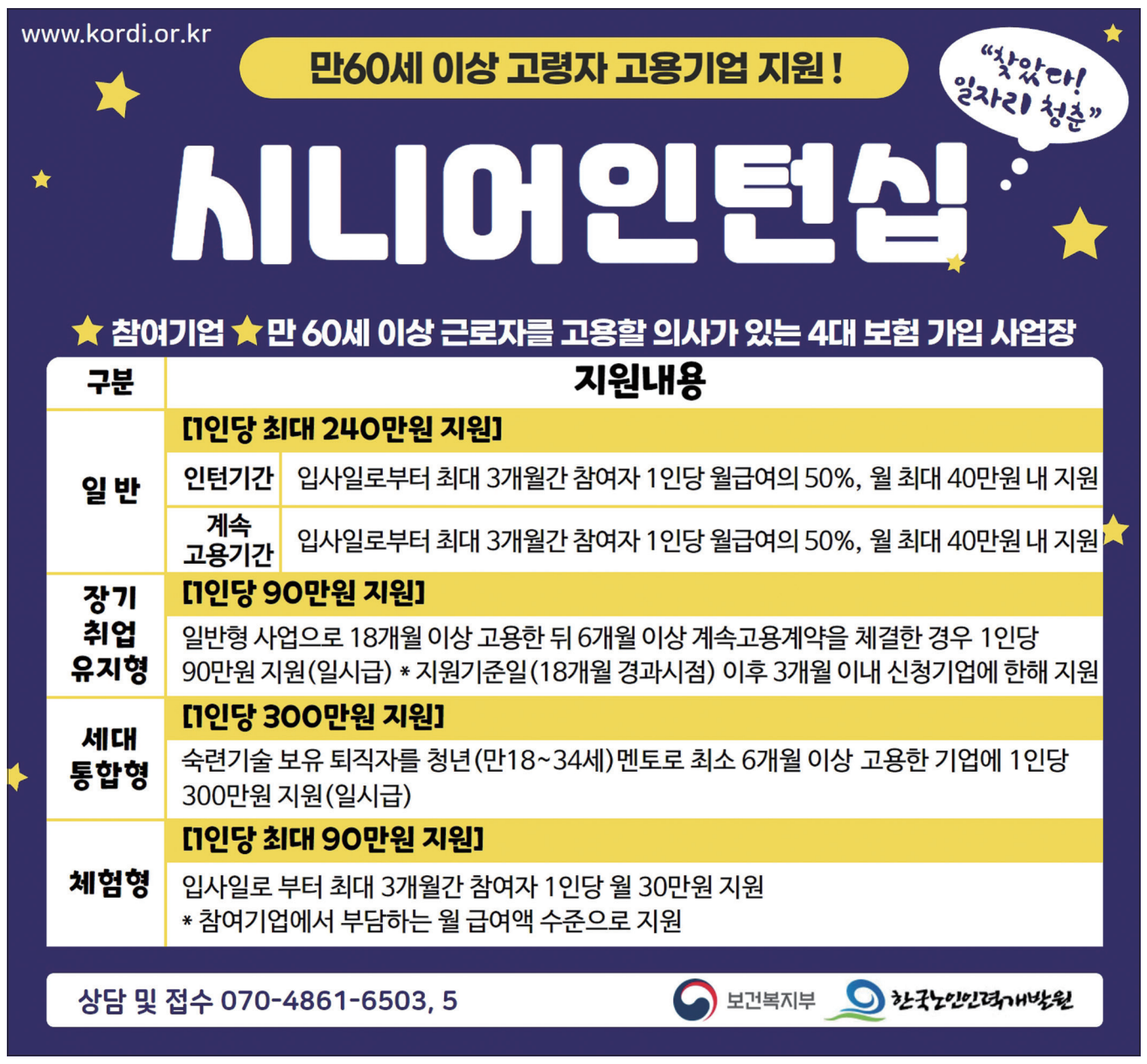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 아닌 지역일꾼 경연장 되어야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의 살림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지난 금요일 후보 등록을 마감, 오는 19일부터 13일 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652명을 선출한다. 도지사 후보는 총 6명이, 교육감은 2명이 등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고 있는 민주정치 발전의 핵심인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잘 선출해야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실시됨으로써 지방정부가 갖는 예산집행권, 인허가권, 인사권 등이 상당히 강화돼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과거 선거보다 더욱 강조된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선진국과 같이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나고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실시되는 선거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풀뿌리 생활정치의 지방선거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상태로 중앙정치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크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종속되면 지역발전은 어렵다.

특히 지난 3·9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각각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를 지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소속 중앙당도 이런 선거전략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으니,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앙정치의 압도 속에서 유권자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중앙정치 프레임에 이끌려 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이 아닌 여야 정쟁 프레임에 의해 대선 연장선상에서 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게 된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에 의하여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지 결코 대선 연장 선거가 아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살림과 복지· 안전· 환경· 교육 등 제반 여건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그동안 지역민은 실감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토대를 튼튼히 하여 지역도 발전시키고 또한 민주정치도 공고화하려면 유권자들은 중앙정치 선동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역을 발전시킬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지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